

KERI Brief

현금 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kim@keri.org)

최 근 신용카드가 보편화하고 모바일 뱅킹이 확대됨에 따라 지폐와 동전이 없는 법정 화폐 제도, 이른바 ‘현금 없는 경제’(cashless economy)에 대한 논의가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금 없는 경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와 국제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경제에 던지는 시사점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현금 거래의 비효율성이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만 GDP 1~2%에 이른다. 현금 없는 사회에선 매년 그만큼 경제가 더 성장하는 셈이다. 결국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둘째,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인 거시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초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환경이 고착되어 가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기대거나 재정확대 정책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선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정책 틀 안에서 네거티브 명목금리를 설정할 수 있어,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어 세율인상 없이도 재정적자폭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한국도 경제활동인구 감소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세입원천은 줄어 재정적자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현금없는 사회에는 그에 대비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공론되면 핀테크 산업을 자극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좋은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 오프라인 금융제도에나 어울리는 규제들로 인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가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관치금융과 불필요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현금사용에 익숙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합법적이지만 그냥 숨기고 싶은 거래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금융실명제 초기처럼 단기적으로 거래 자체가 다소 움츠러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의 정비도 진행하고 이행 목표 시점도 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한국이 저출산·저성장·저물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 보인다.

1. 도입

□ 최근 신용카드가 보편화하고 모바일 banking이 확대됨에 따라 지폐와 동전이 없는 법정 화폐 제도, 이른바 현금 없는 경제(cashless economy)에 대한 논의가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디지털 법정 화폐의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 등을 개발(Barrdear and Kumhof, 2016)
- 국제통화기금(IMF)은 디지털 법정 화폐와 사적인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기술과 제도 변화의 초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IMF, 2016)
- 스웨덴의 소매점들이 종이돈과 동전과 같은 현금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Guardian, 2016), 덴마크 정부 역시 유사한 법안을 마련(Fortune, 2015)
 - 스웨덴과 덴마크는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의 이행 완료 계획
 - 새로운 지폐와 동전의 발행을 중단하고 기존 유통 중인 현금은 점진적으로 회수

□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1차적인 배경은, 현금 사용의 직접적/사회적 비용이 여타 전자결제지급 수단들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

-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현금 거래에 소요되는 건당 거래비용은 카드를 이용했을 때의 건당 거래비용보다 73%나 더 많음(Norges Bank, 2014).

- 미국의 경우에도 2012년 한 해 동안 소비자가 현금 사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은 430억 달러에 이르고, 기업이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550억 달러에 이르러 민간부문에서만 1,000억 달러에 육박(Chakravorti and Mazzotta, 2013)

- 이는 정부 측 세수 손실과 현금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민간부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크기로, 2012년 기준 미국 GDP의 0.6%
- 정부 세수와 지폐 인쇄 비용이 최소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와 민간 부문 비용을 합하면 미국 GDP의 1.2%에 달함.
-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430억 달러)에는 ATM 사용료, 가게 회계 비용, 현금 도난, 인출과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
- 기업들이 지불하는 비용(550억 달러)에는 현금 운반에 필요한 차량, 소매점의 현금 도난, 은행 강도, 기존 ATM 관리 및 신규 지점 시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
- 특히, 기업 부담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르는 소매점의 현금 도난으로, 미국의 범죄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이는 현금 사용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크다는 것임을 의미

- 이들 두 선진국 사례 뿐 아니라, 다른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현금 거래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전체 사회가 물어야 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

- P2P 플랫폼에 기반한 모바일뱅킹 앱 등 대체 전자 지급결제수단의 보급이 확대되면 될수록, 현금 사용의 상대적 편익은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

□ 핀테크 산업이 더욱 성숙해지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은 결국 (전자자동차처럼)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험하게 될 공통된 변화들 중 하나가 될 것

- 이는 과거 영국에서 최초의 현대적 지폐 (banknote)를 도입한 이후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동일한 방식의 법정 지폐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 1800년대 중반 최초의 현대적 지폐가 영국에서 시작된 데에는 기술적으로 지폐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경제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
 - 기술적 여건: 영국은 1800년대 중반 (당시로는 최첨단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인쇄산업과 (핵심 보안기술에 해당하는) 광학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었음.
 - 경제적 필요성: 또한 금화와 은화의 유통만으로는 당시 영국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거래규모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어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음.
 - 이에 1844년, 영국은 지폐발행의 독점권을 영란은행 (Bank of England)에 부여하는 법안(Bank Charter Act)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1855년부터 지폐를 인쇄/유통
- 16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더 효율적인 대체 지급결제수단을 모든 거래에서 통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경제적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1855년부터 지금까지 160년간 지폐 없는 경제성장을 생각할 수 없었듯이, 앞으로는 지폐 있는 경제성장을 점점 더 생각하기 힘들어질 것
 - 기술적 여건: 신용카드의 확대, P2P플랫폼에 기반한 모바일뱅킹 앱,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거래장부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등 핀테크(FinTech) 산업의 성장
 - 경제적 필요성: 최근의 저성장/저금리/저물가/저출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위험과 재정적자의 확대되면서 "현금 없는(cashless)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책"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본 연구는, 현금 없는 경제에서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와 국제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던지는 시사점들에 대해 아래 순서와 같이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함.

- (A) 현금 없는 경제에서의 통화정책
- (B) 현금 없는 경제에서의 조세재정
- (C) 현금 없는 경제와 핀테크 산업
- (D) 현금 없는 사회에서 우려할 것들

2. 현금 없는 경제에서의 통화정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거 침체기와는 다른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한계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주류학계에서도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에 관한 논의가 점증

- 저금리 상황에선 현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도 매우 낮아지므로,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보다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이 확대
- 시장의 명목금리가 0 보다 낮다면 사람들은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대신 각자 집안에 보관할 것
-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보유할 수 있는 한,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은 0 아래에서 선택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음(zero lower bound; 이하 ZLB).

□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ZLB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으나,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 하에선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음.

- 명목이자율이 0보다 더 떨어질 수 없다면, 실질이자율은 디플레이션만큼 오르게 됨.
 - 피셔방정식 참조: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
 - 위 식에서 물가상승률이 음(-)일 때 실질이자율은 그 크기만큼 명목이자율보다 커짐.
 -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0인 어떤 나라의 디플레이션율이 2%라면 실질이자율도 2%
- 명목이자율이 0일 때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현금 은 집안 금고에 보관하려 할 것 → 이는 전체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이끌 수도 있음.

- 실제로 한국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줄인 2013년 전후로 개인금고 판매 증가: 2010~2014년 동안 개인 금고 판매량이 3배 확대 (Economist, 2015)

- 이러한 사실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명목이자율 하락에도 현금 보유 인센티브가 매우 커짐을 보여줌.
- 결국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누구도 은행에 돈을 맡길 인센티브가 없어지므로, 은행은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बैं킹시스템 붕괴 상황 발생

- 명목이자율이 0일 때 화폐의 실질구매력(혹은 실질이자율)은 디플레이션을 만큼 상승하므로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따라서 기업은 투자를 미룰 것

- 이렇게 위축된 소비와 투자는 더 높은 디플레이션 유발

- 이로 인해 더 높아진 실질이자율은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 형성

□ 명목이자율을 0 아래로 조정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발생 시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

-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본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모두 직접적 유동성 공급 수단에 의존

- Tallman and Zaman(2012)는 ZLB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 미국의 연준금리(Federal Funds Rate)는 마이너스 5~6% 선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

- ZLB로 자유로웠다면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세계 경제가 더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불분명(Coeuré, 2015)

- 그러나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자산에 또 다른 버블이 생겨나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정상화를 위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의 부작용(Buiter, 2009, 2015)
- 또한 일본의 경우 20년에 걸친 양적 완화 정책으로도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 (Goodfriend, 2015)

▣ 반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은 ZLB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함.

-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이와 함께 소비가 더욱 위축되기 시작하면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디플레이션 위험이 확대되는 저성장 저물가 상황은 불가피
- 인구구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임계점 도달 등, 과거 20년 전 일본을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닮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시도한 것과 동일한 양적 완화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론 가능
-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화정책은 네거티브(-) 금리정책이나, 이는 현금 없는 경제가 선행되어야 가능
 - 이런 정책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점에서는 아주 비전통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자율을 통화정책의 기본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매우 전통적이며 이미 확립된 이론적 틀 내에서 비교적 쉽게 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물론, 현금을 사용하면서도 명목이자율을 사실상 0 아래로 조정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님: Mankiw(2009)에 따르면, 매 지폐 마다 표기된 시

리얼번호를 복권번호처럼 주기적으로 뽑아 당첨된 지폐의 가치를 0으로 만드는 법안이 있다면, 지폐의 기대가치는 실제로 0이 될 확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작아질 것

- 결국 통화정책의 ZLB 제약을 없애기 위해 무엇이 더 효과적인 방안인지가 관건

3. 현금 없는 경제에서의 재정정책

▣ 현금축적과 현금거래는 개인 습관 외에도 크고 작은 조세회피 의도와도 밀접히 연관

- Rogoff(1998, 2002)는 적어도 50% 이상의 현금거래가 거래 자체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미국의 경우 2013년 기준, 1인당 평균(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4,000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000달러 이상을 100달러짜리 지폐로 보관(Rogoff, 2014): <표 1> 참조

- 한국의 경우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17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25만 원 이상을 5만 원권 지폐로 보관: <표 2> 참조

▣ 지하경제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선진국 문턱에서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정부 재정적자는 확대

- 여기서 지하경제(shadow economy)는 합법적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나 탈루 등의 목적으로 숨겨지고 있는 경제로 정의

<표 1> 미국의 화폐단위별 현금통화

2013년 말잔 기준

화폐단위	명목가치(십억 달러)	전체 현금통화 중 비중(%)	2013년 GDP 대비 비중(%)
\$1	\$10.6	0.885%	0.063%
\$2	\$2.1	0.175%	0.013%
\$5	\$12.7	1.060%	0.076%
\$10	\$18.5	1.544%	0.110%
\$20	\$155.0	12.935%	0.923%
\$50	\$74.5	6.217%	0.443%
\$100	\$924.7	77.168%	5.504%
\$500 to \$10,000	\$0.3	0.025%	0.002%
현금총계	\$1,198.3	100%	7.1335%

출처: Rogoff(2014)에서 가져옴.

<표 2> 한국의 화폐단위별 현금통화

2015년 말잔 기준

화폐단위	명목가치(십억 원)	전체 현금통화 중 비중(%)	2015년 GDP 대비 비중(%)
₩1,000	₩1,487.9	1.178%	0.095%
₩5,000	₩1,307.1	1.509%	0.084%
₩10,000	₩17,229.9	19.892%	1.105%
₩50,000	₩64,323.6	74.261%	4.127%
지폐총계	₩84,348.5	97.380%	5.411%
동전총계	₩2,269.4	2.620%	0.146%
현금총계	₩86,617.9	100%	5.557%

자료: ECOS 이용 저자 계산

- Schneider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OECD 평균 지하경제의 규모는 GDP 대비 16~18% 사이로 추정: 1999년 17.7%, 2007년 16.6%

○ 2007년 기준으로 스위스의 지하경제 규모가 8.1%로 가장 작았으며, 미국은 8.4%로 2위

○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25.6%로 추정: 이는 스페인(22.2%), 포르투갈(23.0%)보다도 크고 그리스(26.5%)와 멕시코(28.8%)보다는 다소 작음.

○ 이들 남유럽 국가들과 멕시코는 모두 선진국 문턱에서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경험하였으며, 성장속도의 둔화는 이들 국가의 정부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

□ 미국의 경우조차 현금 거래를 통한 직접적 조세탈루 규모만 최소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Chakravorti and Mazzotta(2013)에 따르면,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연간 1,000억 달러 규모(2012년 GDP 대비 0.62%)의 세수 손실이 현금 거래를 통해 소득을 낮춰 신고하기 때문

- 그 외 정부 지출 면에서는 지폐 인쇄 및 유통을 위해 2012년 12억 달러 소요

□ 현금 없는 경제가 실현되면 세입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 도움

-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금 사용에 따른 세수 손실 비중이 미국에 비해 클 것임.

- 따라서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현금 없는 경제로 이행할 때 얻게 되는 세수 증대 효과 역시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이처럼 현금 거래로 인해 가려져 있던 경제활동 영역이 양지로 드러나면 중장기적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정책 가능

□ 한국의 경우,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하면 세율 인상 없이도 지금보다 대략 20~64조 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율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

- [방법 1] 현재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최소 17.1% (안중석 외, 2010; 2008년 기준 추정치)와 최대 25.6%(Schneider et al., 2010; 2007년 추정치)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고, 평균세율을 16%로 보면(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여부분을 제외),

○ 지하경제규모비율*평균세율 = 2.74% ~ 4.1% 사이 (GDP 대비)

○ 이는 동일한 세율 하에서도 43조~64조 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함을 의미

- [방법 2] 지하경제 규모와 현금 사용에 따른 직접적 탈루규모에 선형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8.4%로 추정되는 미국의 경우 GDP대비 0.62% 가량의 조세탈루가 그에 해당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이용

○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비율)/(미국의 지하경제규모비율)*0.62 = 1.26% ~ 1.89% 사이

○ 2015년 GDP에 대입하면 이는 대략 20조~29조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함을 의미

○ 물론 이는 현금을 사용해 소득을 낮게 보고하는 방식의 직접적 조세 탈루 규모로 최소치 범위에 해당

- 다만 세원에 따라 탈루율에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안중석 외, 2010), 실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생길 수 있는 더욱 정확한 세수 증대 혹은 세율 인하 효과는 세목별 추정이 필요

4. 현금 없는 경제와 핀테크 산업

□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서로를 자극하며 병행하고 있음.

- 지금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 이들 국가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에서도 최상위 그룹을 형성
- 국제정보통신연맹(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발전 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의 국가 순위에서 스칸디나비아 3국은 모두 10위권 이내에 포진: <표 3> 참조

- 2015년 덴마크 2위, 스웨덴 5위, 노르웨이 10위
- 그 외 북유럽(Nordic) 국가인 아이슬란드와 핀란드 역시 각각 3위와 12위로 상위 그룹
- 높은 ICT 수준과 높은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에선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함께 이뤄지고 있음.
- 런던, 뉴욕, 싱가포르, 텔아비브 등 현재 핀테크 허브 선두그룹이 향후 스톡홀름, 오슬로, 코펜하겐, 헬싱키, 암스테르담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FinTech Ranking, 2016b)

<표 3> 2015년 IDI(ICT Development Index) 선두 그룹

순위	나라	지수
1	한국	8.93
2	덴마크	8.88
3	아이슬란드	8.86
4	영국	8.75
5	스웨덴	8.67
6	룩셈부르크	8.59
7	스위스	8.56
8	네덜란드	8.53
9	홍콩	8.52
10	노르웨이	8.49
11	일본	8.47
12	핀란드	8.36
13	호주	8.29
14	독일	8.22
15	미국	8.19

자료: 국제정보통신연맹(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참조: ITU는 매년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성(전화화선, 모바일화선,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비율, 인터넷 접속 속도), 사용정도(인터넷 사용 및 브로드밴드 이용률), 기초역량(문자해독율과 교육수준) 등의 세 카테고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국가별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를 IDI 지수라 함.

□ 핀테크 산업은 빠르게 스웨덴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일상 거래에서 모바일뱅킹 앱이 보편적으로 사용
 - 여러 은행이 모여 공동으로 개발한 전화번호 기반 모바일뱅킹 앱 Swish는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50만 이상이 사용
 - Swish 하나의 앱을 통해서만 최근 5월 한달 간 약 79억 SEK(9.3억 USD) 결제
- 미국 시장을 비롯하여 스웨덴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확대
 - 2000년대 중반 설립된 스타트업들이 10년 만에 세계 톱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 iZettle과 Klarna 등은 KPMG와 H2 Ventures가 선정한 핀테크 100에서 각각 9위와 27위에 올랐고,
 - 이들 기업들은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핀테크 스타트업 톱 25 리스트에도 포함(FinTech Ranking, 2016a)

□ 스웨덴은 핀테크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현금 없는 경제로 이행 중: 최근 스웨덴 중앙은행이 나서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까지 제기할 정도

-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향후 5년 이내에 거의 완료될 것으로 전망": Guardian(2016)에서 인용된 스웨덴 왕립기술원(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의 Niklas Arvidsson 인터뷰 재인용
- 현재 약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지폐와 동전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심지어 빅 이슈(Big Issue) 등 길거리 잡지를 파는 이들과 교회 성금 조차 신용카드와 모바일 폰 앱을 이용 지불 가능(New York Times, 2015; Guardian, 2016)

- 전국 1,600개 은행지점 중에서 이미 900여 지점은 현금을 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금으로 예금하거나 인출하지 못함(Guardian, 2016).

- Segendorf and Wretman(2015)는 스웨덴의 이행 과정을 평가하고, 노인과 시골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장치의 필요성 제기
-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2016년 3월,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은 은행의 현금지급기능 의무화를 의회에 제안(Finextra Research, 2016)

-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에서 가장 앞서 있는 스웨덴의 경우 개인의 관습 존중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려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벤치마크를 제공

□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에 못지 않는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잘못된 규제들은 여전히 걸림돌

- 예를 들어, 과거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아래에서 만들어진 금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은행과 모바일뱅킹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김미애, 2015)
- 또한 특정 서비스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기술 발전 자체를 가로막고 있음.
 - ActiveX와 같은 특정 모듈의 강제는 여타 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저해
 - 감독기관의 기술중립 원칙이 확립될 때 자유경쟁을 통해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

- 금융과 기술 양측에 존재하는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한국은 높은 ICT 활용성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가 2015년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 중 정치·규제 환경 평가 부문에서는 42위에 머물렀다. (김영신과 송용주(2016)에서 재인용)
-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들을 빠르게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핀테크를 한국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게 돕는 경제제도가 될 것임.

5. 현금 없는 경제에서 우려할 것들

□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음: (1)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개인의 선택 제한 문제, (2) 개인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 문제, (3) 시행 초기 단기적인 거래 위축 가능성이나 현금 해외 유출 등

- 개인의 선택 제한

- 여러 지급결제수단들 중 어떤 수단으로 어떤 상품을 거래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는데 만약 현금이 사라지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하나 줄어드는 셈
- 그러나 법정 화폐를 어떤 물질에 담을지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발행 독점권에 관한 것으로 종이/플라스틱/디지털저장장치 중 어디에 가치를 표시할 지는 중앙은행의 몫으로, 오늘날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반론이 있음.

- 개인프라이버시

- 모든 지급과 결제에 기록이 남으면 마약, 조폭, 도난 등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거래 중에도 그냥 숨기고 싶은 거래가 있을 수 있음.
- 의료보험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서버에 가족관계와 진료기록이 남고, 근태관리를 위해 기업 서버에 출퇴근 기록이 남고, 빌딩관리를 위해 CCTV 기록이 남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로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유의해서 관련법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시행 초기 거래 위축 가능성

- 금융실명제 초기처럼 단기적으로는 거래 자체가 움츠러들 수 있고, 외화로라도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들은 해외 계좌 등으로 돈을 미리 옮겨놓

려 할 것이므로 자본 유출도 가능

- 시행 초기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완전시행 목표시점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이행이 필요

6. 요약

□ 신용카드가 보편화하고 P2P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뱅킹이 확대됨에 따라 지폐와 동전이 없는 법정 화폐 제도, 이른바 '현금 없는 경제'에 대한 논의가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1차적인 배경은 현금의 비효율성 때문으로, 현금 사용으로 인한 비용만 줄어도 매년 그만큼 경제가 더 성장하는 효과가 있음.

- 미국에서 현금 사용으로 인해 정부, 소비자, 기업 등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만 한 해 2,000억 달러 (2012년 기준)

- 미국 GDP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여기에는 ATM 사용료 및 관리비용, 소매점 현금 도난, 현금 운반 및 인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

- 소매점 현금 도난 손실액만 연간 400억 달러에 달해, 관련 치안 및 사법 활동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

□ 또한 '현금 없는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초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환경이 고착되어 가는 가운데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음.

- 저물가가 지속되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고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는 더욱 줄고 디플레이션은 다시 더 커져 경제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음.

- 현금 없는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네거티브 명목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어 디플레이션만큼 명목 이자율을 낮출 수 있고 따라서 경제주체가 기준으로

삼는 실질이자율의 상승을 막을 수 있음.

- 네거티브 금리정책은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보다 출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미국의 경우 10~20년), 효과도 매우 제한적(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감소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 본격적인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대비해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현금 없는 경제로 서둘러 이행해야 함.

- 또한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위한 직간접적 비용도 매우 낮음: 한국처럼 일상거래가 불편할 정도로 화폐단위가 큰 경우(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현금 없는 사회가 선행되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경제적 혼란 없이 단행 가능

□ 한국의 경우 높은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현금 없는 사회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음.

- 한국은 세계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 1위 국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와 스웨덴이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없기 때문

- 과거 오프라인 금융제도에나 어울리는 철지난 규제들을 없애고, 정부의 금융권 인사권을 포함해 구시대의 관치금융 관행들을 폐지해야 함.

□ 물론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있음.

- 현금사용에 익숙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음

므로 단계별 이행 계획 수립 필요

- 모든 지급과 결제에 기록이 남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합법적이지만 그냥 숨기고 싶은 거래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법률 보강도 필요
- 또한 금융실명제 초기처럼 단기적으로 거래 자체가 다소 움츠러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른 선진국들처럼 목표시점을 설정하고 순차적 이행 필요

[참고문헌]

김미애(2015), “금융과 ICT기술 융합을 위한 무규제 원칙”,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15-01

김영신; 송용주(2016), “국내 ICT산업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ICT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mimeo

안종석 외(2010),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년 12월

Buiter, Willem(2009) “Negative Nominal Interest Rates: Three Ways to Overcome the Zero Lower Bound.” NBER Working Paper No. 15118

Buiter, Willem(2015) “It’s Time to Remove the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and Here’s the How-To”, a speech at the CEPR Conference 2015 Removing the Zero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Chakravorti, Bhaskar; Benjamin Mazzotta(2013), “The Cost of Cash in the United States”, The Institute for Business in the Global Context, Tufts University

Cœuré, Benoît(2015) “How Binding is the Zero Lower Bound?”, a speech at the CEPR Conference 2015 Removing the Zero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Goodfriend, Marvin(2015) “Overcoming the Zero Bound with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a speech at the CEPR Conference 2015 Removing the Zero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IMF(2016)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IMF Staff Discussion Note 16/03 (studied by Dong He, Karl Habermeier, Ross Leckow, Vikram Haksar, Yasmin Almeida, Mikari Kashima, Nadim Kyriakos-Saad, Hiroko Oura, Tahsin Saadi Sedik, Natalia Stetsenko, and Concepcion Verdugo-Yepes)

Mankiw, Gregory(2009) “It May Be Time for the Fed to Go Negative.” New York Times, 2009/04/18

Norges Bank(2014), “Costs in the Norwegian Payment System”, Norges Bank Paper No.5|2014

Rogoff, Kenneth(1998) “Foreign and Underground Demand for Euro Notes: Blessing or Curse?”, Economic Policy 26: 263-303

Rogoff, Kenneth(2002) “The Surprising Popularity of Paper Currency”, Finance and Development 39 No. 1

Rogoff, Kenneth(2014) “Costs and Benefits to Phasing Out Paper Currency”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20126

Schneider, Friedrich; Andreas Buehn; Claudio E. Montenegro(2010), “Shadow Economies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62 Countries from 1999 to 2007”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356

Segendorf, Bjorn; Anna-Lena Wretman(2015), “The Swedish Payment Market in Transformation”, Sveriges Riksbank Economic Review 2015(3):48-68

Tallman, Ellis; Saeed Zaman(2012), “Where Would the Federal Funds Rate Be, If It Could Be Negative”, Economic Commentary,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미디어

Economist(2015), “Money for Everything”, 2015/10/03

Fortune(2015), “This Country Wants to Ban the Use of Cash in Stores”, 2015/05/22

Guardian(2016), “Sweden Leads the Race to Become Cashless Society” 2016/06/04

Irish Times(2015), “Nordic Countries Pointing the Way to a Cashless Society”, 2015/01/15

New York Times(2015), “In Sweden, a Cash-Free Future Nears”, 2016/12/26

웹사이트

Finextra Research (2016), "Swedish Central Bank Calls Halt on Moves to a Cashless Economy" 2016/03/18, <https://www.finextra.com/newsarticle/28635/swedish-central-bank-calls-halt-on-moves-to-a-cashless-economy>

FinTech Ranking (2016a), "Infographics: Global Fintech Landscape", 2016/02/19, <http://fintechranking.com/2016/02/19/25-fintech-startups-that-expanded-globally-despite-regulations-other-problems/>

FinTech Ranking (2016b), "Infographics: Global Fintech Landscape", 2016/08/04, <http://fintechranking.com/2016/08/04/infographics-global-fintech-landscape/>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6년 10월 7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